

경기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경기도 문화의 21세기를 그리다

(토론문 모음)

일시 : 2007년 6월 26일(화) 10:00~18:00

장소 :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주최 : 경기문화재단



# 목 차

## 기조강연 “경기도 문화의 21세기를 그리다”

문화정책과 문화의 미래 .....	7
도정일(경희대 명예교수)	

## 1부 문화정책에서의 가치 갈등

「글로벌 시대의 지역문화 : 지역을 넘어 세계로」 토론문 .....	19
노재현(중앙일보 논설위원)	
올리브 나무의 가치는 렉서스로 설명되어야 하나? .....	21
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문화정책의 영역확장과 충돌」에 대한 논평 .....	24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2부 경기도 문화정책에 대한 성찰과 전망

경기문화재단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	29
윤봉구(연극협회 경기도지회장)	
항유자문화정책 활성화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확대 .....	39
황정주(한국민예총 성남지부장)	
「지역의 문화정책, 누가 어떻게 만들고 실현하는가」 토론문 .....	42
방영기(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 3부 경기도 문화정책의 새로운 과제들

국제교류 현황과 개선방안 .....	49
오후석(경기도 문화정책과장)	
「생태문화적 개발의 과제와 전망」 토론문 .....	53
안창모(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문화다양성은 복수성의 윤리가 아니라 권리의 윤리를 의미한다 .....	59
노명우(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기초강연

# 경기도 문화의 21세기를 그리다

---

문화정책과 문화의 미래  
도정일(경희대 명예교수)

---



## 문화정책과 문화의 미래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 책임는사회문화재단 이사장)

(1) 경기문화재단은 수도 서울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들 중에서 경기도가 최초로 설립한 본격적인 문화재단이고 경향 각지 자치단체들에 문화정책 입안과 사업실행의 귀감이 되어온 유명한 재단입니다. 문화계 일각에 몸 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경기도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재단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간 경기 일원의 문화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재단 임직원들과 연구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10년간 경기문화재단이 이룩해 온 많은 업적과 성취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 10년 세월이면 비록 강산은 크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사회도 바뀝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되었던 1997년은 20세기였고 지금은 21세기입니다. 10년 전 우리에게 '미래'였던 21세기가 지금은 우리의 '현재'이고 '우리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지금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과거 왕조시대의 느린 시계로 따지면 좋지 한 세기는 됴직한 세월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 의미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 변화들 중에는 우리가 서투르게나마 예측했던 것들도 있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증대되고 국가 아닌 자치단체 수준에서 세계를 향한 왕성한 진출이 시도되고 '문화'에 대한 지방 정부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 등은 우리가 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입니다.

(3) 21세기가 우리의 현재라고는 하지만 그 세기의 10분의 9 이상이 아직도 우리에게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변화의 개입 가능성'이며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도전의 발생 가능성'입니다. 미래 앞에서 인간은 거의 언제나 눈먼 장님이지만, 그러나 백번 틀리는 수가 있어도 부단히 미래를 예측해야 하고 변화와 도전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사회의 운명입니다. 경기문화재단도 그런 운명으로부터 예외가 아닙니다.

(4) 그러나 예측은 예언이 아니고 점괘 뽑기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문화의 미래를 위한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미래학자들이 곧잘

그려내는 그런 그림들은 대개 황당하고 현실성 없는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그림들보다는 경기도가 향후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었으면 싶은 문화정책과 문화의 모습을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와 연결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가 있고 먼 미래가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예측 가능한 미래'(foreseeable future)이고 먼 미래는 깜깜한 암흑이나 심연처럼 도무지 예측의 잣대를 들어대기 어려운, 그래서 글자 그대로 '먼 미래'(distant future)입니다. 가까운 미래, 혹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시간폭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정도입니다. 가까운 미래는 현재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재로부터 예측의 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속과 변화 사이의 변수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턱대고 미래를 말하거나 추상의 수준에서 변화를 전망하기보다는 현재를 포함해서 가까운 미래에 경기도 같은 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문화란 어떤 것일 수 있는가, 그런 문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5)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문화정책'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정책 '기조'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문화정책의 기조는 우리들 대부분이 흔히 잊어버리고 있는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하나와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화정책 입안자들과 실행자들이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세 번씩은 자문해 보아야 할 그 근본적 질문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광복 이후 60년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 어떤 사회로 만들고자 했으며 지금은 어떠한가? 이것은 우리의 집단적인 사회적 지향과 비전에 관한 질문이며, 문화정책은 그 지향과 비전으로부터 결코 동떨어진 것일 수 없습니다.

(6)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끈 구체적 목표의 하나는 '민주사회의 실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발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수레를 끌고 그 수레 위에 우리의 집단적 꿈이라 할 어떤 사회적 이상을 실현해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가 실현하고자 한 꿈, 우리의 이상은 자유, 평등, 공존이 보장되는 사회, 공포와 빈곤과 억압을 벗어난 사회,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의 사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한, 그리고 애써서 만들어가야 하는 '좋은 사회'의 이상이고 비전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이고 방편이며 수단입니다. 저는 바로 그 '좋은 사회'의 이상과 비전이 문화정책을 이끄는 화살표여야 하고 모든 문화정책의 바탕에 깔리는 근본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저는 우리의 이 같은 사회적 이상이 가까운 미래에, 이를테면 향후 20년 정도의 기간에,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틀림없이 많은 변화들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와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유지해야 하는 것, 지속되는 것이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지속성은 변화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속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만들 수 없고 한국인이 공유할 공통의 기억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회도 방향을 잃고 해매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민주주의를 내팽개치고 어떤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로 돌연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속입니다. 민주사회의 실현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경기도 문화정책도 이 지속적인 과제에 연결되어야 하고, 그 과제의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나 문화재단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8) 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적 노력이 '민주주의의 문화만들기'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인 것만이 아니라 가치, 이념, 태도, 정신상태를 포함한 '문화체제'입니다. 민주주의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 계승이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근대적 헌법이 없어서 우리가 오랜 기간 민주주의의 파행을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문화는 정치민주주의를 떠받치고 민주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토양이고 토대입니다. 정치 따로 있고 문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결코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신상태, 행동과 태도에 민주적 원칙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문화적 과제'입니다. 중앙정부 못지않게 자치단체들도 민주주의의 문화를 사회에 확산시키고 착근시키는 일이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9) 민주주의의 문화정책이란 어떤 것입니까?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으로서의 표현, 사상, 믿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문화를 위한 기초 조건입니다. 모든 시민과 주민이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조건, 소속집단, 종교, 인종 등에 의한 어떤 차별도 받음이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수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문화정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문화적 환경을 누리고 여가를 향유하며,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학습을 추구하여 스스로 기회를 창출할 권리, 모든 분야의 지식정보와 전달매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자유로운 표현수단을 가질 권리, 시민의 문화적 삶에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민주주의 문화정책입니다. 시민이 부당한 감시, 검열,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하고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게 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문화정책입니다.

(10) 또 있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을 비롯한 공공의 문화기반시설들을 부단히 확충하고 풀뿌리 민생을 도울 봉사체제를 강화하며 문화의 공공성과 문화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민주주의 문화정책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과 활동공간을 문화의 관점에서 개선하며 법률과 조례와 제도는 물론 각종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민주주의 문화정책입니다. 주민 개개인과 역내 민간단체들이 전개하고자 하는 교육, 자기계발, 창작 등의 문화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며, 시민의 문화적 삶에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에는 민간의 창의적 제안들을 환영하고 존중하여 민간단체들과의 제휴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민주주의 문화정책입니다. 저는 이런 정책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가가 경기도 문화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1) 민주주의 문화정책은 이밖에도 많은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식이 제대로 박힌 문화정책 입안자들이라면 문화정책이 뭐냐, 무엇을 할 것이냐 등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과제는 넘쳐 납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일, 지역 고유의 언어, 민속, 역사유적, 설화, 가락, 춤, 공예 등의 전통문화자원들과 표현형식들을 잘 보존하고 그 자원들을 새로운 창조와 변용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역문화는 열등한 문화가 아니라 높은 고유성의 가치를 지닌 풍요한 문화일 수 있습니다.

(12) 불행히도 지금의 세계화 추세는 고유의 토착문화들을 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 가운데 하나지요. 독특한 지역문화들은 한 나라는 물론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한 예로, 언어를 보십시오. 국가에는 표준국어가 있어야 하지만, 표준어 때문에 지방의 언어적 표현방식들이 주눅 들고 사그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 드라마, 연극, 문학에서 관객과 독자를 향유 즐겁게 하는 것은 표준국어가

아니라 지방어들이입니다. “참 좋군요”라는 것은 재미없고 멋대加里 없는 표준국어식 표현이고 “위매 참 좋구만이라” “앗따, 사람 지기네” 같은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생동감 넘치는 지방어적 표현들입니다. 제주 지방어는 제주도 사람들이 아직 그 진가를 잘 알지 못하는 귀중한 문화자산이고 관광자원입니다. 다양성을 빼고 나면 문화는 활력과 창조력을 잃고 창백해집니다. ‘생태계’(eco-system)는 자연생태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화생태계도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이 자연생태계의 자랑이라면 표현의 다양성은 문화생태계의 자랑입니다. 유네스코(UNESCO)가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을 마련한 것도 세계 각 지역의 자생적 문화들이 인간 창조성의 다양한 표현이며 인류 공유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과 삶의 방식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자생적 지역축제도 그런 다양성의 일부입니다. 지역문화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정체성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13) 경제발전과 문화의 관계를 현명하게 정립하는 일도 미래 문화정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는 이 화두에는 경제가치와 문화가치 사이의 갈등, 경제발전과 문화 중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 문화예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 문화산업과 문화시장의 세계적 팽창 추세와 문화발전의 관계 등 다수의 어려운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거나 “이제는 문화가 중요해졌다”는 등등의 발언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문화의 세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문화’는 거의 예외없이 문화산업, 문화상품, 문화시장이란 때의 문화입니다. 우리 문광부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의 인식수준도 그 선에 머물러 있고, 대다수 정치인의 문화에 관한 생각도 예외가 아닙니다.

(14) 사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산업으로서의 문화, 새로운 서비스와 소비형식으로서의 문화, 시장에 내다 팔 상품으로서의 문화가 지니게 된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문화산업은 오늘날 거대한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있고 문화시장은 국제 교역의 큰 몫을 차지하면서 세계적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냉장고, 휴대폰을 팔듯이 이제는 “문화를 팔아야 한다”는 말이 경제정책은 물론 문화정책 수립자들의 입에서도 무슨 ‘만트라’(眞言)처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5)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은 문화를 팔아야 하는 시대, 문화산업을 육성 발전

시키고 양질의 문화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해서 세계 문화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획득하고 관광을 포함한 문화 서비스의 세계화를 부단히 추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화에는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문화는 오늘날 수동적 소비와 향수의 영역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산의 영역입니다. 문화산업과 문화서비스 분야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어떤 제조업에도 뒤지지 않을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와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도 문화는 크게 기여합니다. 전쟁보다는 관광이 100배 낫고 탱크, 미사일, 폭탄보다는 영화 한 편(아주 고약한 것이 아닌 한)이 세계평화와 이해증진에 더 많이 공헌합니다.

(16) 그러나 문화정책 담당자들이 문화의 경제적 가치나 경제발전과 문화의 관계를 정책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는 신중한 분별과 판단이 요구됩니다. 첫째, 문화산업정책이 곧바로 문화정책은 아니라는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산업적 생산, 유통, 소비를 목표로 조직되는 산업분야이며, 산업이기 때문에 ‘이윤동기’의 절대적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산업의 한 분야로만 축소되지 않는 광범한 영역이며, 특히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재로서의 문화기반시설이나 서비스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할 수 없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큰 부분이 시장논리, 시장가치, 이윤동기 같은 것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영역’이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합니다.

(17) 이런 망각 때문에 문화 영역에서 시장논리와 공공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됩니다. 김대중 정권 시기에 도서관, 국립극장, 박물관 등에 시장원리 비슷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도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지만, 이럴 때 정책입안자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공공성과 공적 가치이지 이윤, 수익, 시장가치가 아닙니다. 예컨대,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사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시설, 정보, 지식, 교육, 자기계발 등의 수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들, 그리고 그 가치들을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창출하는, 역시 계량화가 어려운 부가가치이지 도서관 자체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아닙니다.

(18) 둘째,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사이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문화는 경제발전을 자극하고 경제성장의 큰 몫을 담당하며, 문화산업과 문화시장의 경우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문화는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문화는 경제발전의 ‘목적’입

니다. 이 부분의 분별은 참으로 중요해서 정책 담당자들에게 백번 강조하고 또 백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는 경제발전을 목표로 해서 내달릴 수 있지만, 그러나 경제발전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위한' 방편이자 수단이지 그 자체로는 목적이 아닙니다.

(19) 그 '어떤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삶'이고 '좋은 사회'입니다. 경제적 가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어떤 다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며 그 자체로는 목적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 '어떤 다른 가치'란 그 자체로 좋은 삶을 구성하는 가치들, 그 자체로 좋은 삶의 내용이자 좋은 사회의 토대가 되는 가치들입니다. 그 가치들이 바로 '문화적 가치'입니다. 문화적 가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래서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그 자체로 목적인 가치입니다. 이를테면 생명의 존엄이라는 가치, 평화애호라는 가치, 공존의 정의라는 가치가 그런 가치입니다. 문화적 가치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에 대한 존중, 이웃을 향한 선의와 배려, 사랑과 관용, 자연생태계의 보전, 사회적 역사적 기억의 공유라는 가치들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 지금처럼 국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대에는 개발과 성장을 포함한 경제발전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명령이 거의 모든 분야의 정책 수립자들을 압도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자치단체들로서는 개발과 성장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경제발전, 혹은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갈등을 일으킬 경우에는 '경제부터 먼저'라는 논리가 우선합니다.

(21) 그런데 경제발전에는 한 가지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만을 앞세워서는 되레 경제발전이 잘 되지 않거나 경제성장이 거둔 성과 이상의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것, 경제발전은 경제적 가치 아닌 다른 가치들의 안내를 받을 때에만 그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역설이 그것입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단적 가치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 가치로서의 문화적 가치입니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발전을 자극하고 안내하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다르다는 점에서 비경제적 가치지만 반(反)경제적 가치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이나 성장이 비경제적 가치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할 때 경제발전은 무엇을 위한 발전인지 마침내 알 수 없게 되고, 그 맹목적 발전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인간적 희생과 고통과 낭비를 요구하게 된다

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그런 희생과 고통을 수없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22) 문화는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가 추구해야 할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을 공급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맞닥뜨려야 하는 수많은 위기들을 타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적 정서적 심리적 능력을 고양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문화라는 것이 언제나 좋고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갈등, 반목, 충돌의 장이기도 하다는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문명과 문명 사이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고 문화적 갈등이 정치적 대립으로, 혹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태발전 때문에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높이는 일이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들의 (중앙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경우에도) 중요한 문화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3) 우리도 이미 단일문화나 단일민족의 사회가 아닙니다. 문화의 파편화와 '니쉬'(niche)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문화산업과 문화시장의 절대적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대중의 문화적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향, 가치관, 목표, 세대, 계층, 소득, 이념, 이해관계 등의 차이가 수많은 구멍과 틈새와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들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을 모래알처럼 갈라놓고 있습니다. 한 측면에서 이것은 다양성의 확장에 따른 문화의 '다문화화'(多文化化) 혹은 사회의 '다중사회화'(多衆社會化) 현상의 일부일지 모릅니다. 한때 문화는 공동체 성원들을 결속시키는 공감과 정체성의 공급자였지만, 지금 문화는 그런 구심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24) 이런 현상 때문에 오늘날 문화정책 수립자들에게는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와 결속을 위한 문화적 방안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아야 하는 도전적 과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문화의 끈으로 묶어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민주사회이고 다중사회라 할지라도 공동체적 유대, 공감, 결속이 불가능한 사회는 분명 풍비박산의 위협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위기 국면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에 대응할 문화적 방안이 앞서 말씀드린 문화적 가치들의 부단한 '확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문화적 가치들은 사회구성원들이 모든 차이와 대립을 넘어 폭넓게 동의하고 수용하고 함께 추구할만한 보편성과 운

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5) 우리는 살벌하고 냉혹한 국제 경쟁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존력을 키우워 살아남고 사회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과제임과 동시에 자치단체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시장과 교역의 세계화는 종종 단위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주권을 위축시키고 문화적 주권을 위협합니다. 나라 안팎의 난개발과 악개발이 초래한 생태계 파괴는 지구온난화의 결과가 보여주듯 이 지상에서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거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자살충동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부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족과 행복감보다는 박탈감과 불행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전혀 없는 탐욕의 문화가 한국인의 에토스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26) 이런 상황에서 문화정책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가라는 것도 정책담당자들에게 안겨진 도전적 과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동아시아 문화의, 혹은 동아시아 문명의 일원으로서의 한국이 지금의 세계를 향해서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어떤 대안과 비전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립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중앙정부가건 지방정부의 차원에서건 모두 중요한 문화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하되 그 생존이 욕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게 할 방안들, 잘 먹고 잘 살되 그 삶이 좋은 삶이 되게 할 대안적 가치들은 세계의, 특히 동아시아의 문화 전통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내어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 만들어야 하는 사회는 결국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사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정책이 목표로 하는 문화사회일 것입니다.

(27) 19세기 러시아의 망명 지식인 알렉산드르 헤르젠은 인간의 역사가 돌아가는 꼴을 이런 말로 요약해보고자 했습니다. "역사는 매 순간 1백 개의 문을 두드린다. 그런데 그 1백 개의 문들은 모두 우연이라는 이름의 수문장들이 지키고 있다." 제 아무리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도 필연이 아니게 하고 제 아무리 우연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역사의 기묘한 진행을 갈파하고자 한 말이지요. 규모를 좁혀서, 그리고 좀 다른 각도에서, 저는 정책 수립자들이 역사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문화재단도 그런 수문장의 하나일 것입니다. (\*)





1부

# 문화정책에서의 가치 갈등

---

「글로벌 시대의 지역문화 : 지역을 넘어 세계로」

토론문

노재현(중앙일보 논설위원)

올리브 나무의 가치는 럭셔리로 설명되어야 하나?

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문화정책의 영역확장과 충돌」에 대한 논평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글로벌 시대의 지역문화 : 지역을 넘어 세계로」 토론문

노재현(중앙일보 논설위원)

먼저 공유식 교수님의 『글로벌 시대의 지역문화:지역을 넘어 세계로』 발제 내용에 깊은 공감과 경의를 표합니다. 발제문은 문화적 측면에서의 세계화가 보편화·동질화·획일화 및 특수화·이질화·다양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장을 한국문화 대 세계문화로 좁혀서 고찰한 다음, 한국 내에서의 중심문화(서울) 대 주변문화(경기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역지로 서울문화에 대항하거나 경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난립하는 지역축제의 전시효과 위주, 주민참여 결여, 지역성 무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 돈, 사람의 세 측면에서 지역문화 창달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발제자께서는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주장하셨지만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이 법안에 대한 문광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안 중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국·공유재산 무상대여, 문화복지사 자격제도 신설, 문화도시 지정, 지역 문화예술위와 한국지역문화진흥원 설립 등의 조항은 예산 회계원칙에 어긋나거나 기존 기구·제도와 겹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통합적인 법안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구 설립이나 예산 확보 등 '돈'과 '자리'를 늘리는 데 법안이 이용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 광주문화도시 조성에서부터 위원장 임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문화도시라는 것도 경주·전부·부여·수원 등이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을 놓고서는 광주시의회가 반대 결의문을 내는 바람에 광주시의회와 경북도의회·경주시의회가 한판 붙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의 문화진흥정책이 지나치게 제도 신설과 예산 늘리기에만 목표가 맞춰지다 보니 이런 '비문화적' 풍경들이 연출되는 것 아닐까요.

돈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로또 기금이든 수의계약이든 돈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지역 문화정책이 추진됩니다. 관(지자체) 위주로 하향식·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이 구상되고 집행된 결과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장

의 공명심과 다음 선거 포발갈기 심리도 큰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작 외롭게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각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이런 행태에 얼마나 공감을 할까요.

역시 초점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곧 소프트웨어요 콘텐츠입니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성'이 가미된 작품을 창조하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일을 문화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음으로는 그 창작품을 향유할 지역 소비자(주민)의 편의를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예산은 이들 문화 생산자·소비자의 종속변수로 자리잡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주장으로 들리시겠지만,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여전히 관 위주, 표발 위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2005년을 기점을 인구도 서울시를 능가했고, 든든한 문화재단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 문화정책이 즉각 시행되길 바랍니다. 특히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팔도장터'니 뭐니 해서 아무 지역성도 없이 며칠간의 술판으로 변질돼버린 기초단체들의 지역축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초단체들이 힘을 합쳐 지역성에 맞는 축제 컨셉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매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축제를 개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인구가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많아 지역 토박이보다는 외지로부터의 이주민이 다수인 만큼 지역성 컨셉을 잡을 때 이같은 인구구성 요인을 잘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성을 겸비한 고 백남준씨는 성공적인 컨셉으로 여겨집니다.

## 올리브 나무의 가치는 렉서스로 설명되어야 하나?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문화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는 논리로 역설하는 임상오교수님의 활동과 이론에 대해 저는 여러 가지로 공감해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문화정책과 문화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평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한 수 배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1. 저 같이 문화 동네에서 노는 사람들에게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돌이켜 보면 80년대 '문화운동'의 시절에는 '운동' 속에서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문화'운동 보다는 문화'운동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문화가 아닌 문화 밖의 영역에 견주거나 빗대어 설득시키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시도를 통해 문화가 운동적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실현시켰다고 할 수 있지만 문화적 요건을 갖추려는 노력은 소홀 내지는 방기했다는 비판을 들어 마땅함을 자백합니다. 시대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문화의 운동화를 '운동의 문화화'라는 지향 속에서 견지하지 못했다는 반성입니다. 그러한 반성의 눈으로 요즘의 문화정책이나 문화에 대한 담론들을 접하면 약간의 염려를 하게 됩니다. 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경제로 설명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발표문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와 같은 일면적 시각'들이 많습니다. 최근 문화산업이나 CT 등에 대한 담론은 거의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뜻 있는 문화경제학자'들은 (문화와 경제가) "모순과 긴장 관계를 내포하면서 관계하고,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그들의 본의와 무관하게 결국 "문화도 돈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 문화정책에도 그러한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의한국'이라는 문화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창의(creativity)가 '창의력'으로 '신성장동력'으로, 심지어는 가장 비문화적인 '경쟁력'이란 단어로 마구 진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돈이 안 되는 예술, 가난한 예술가는 마치 사회 안전망 구축과도 같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취급되면서 문화재정 확대를 위한 '앵벌

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예술마저도 (응용을 염두에 둔) '기초예술'을 주장하면서 그에 영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자체의 문화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문화시설'을 짓고 커다란 축제를 벌이는 과시형 문화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요즘에는 '문화산업', '관광축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의 '창조도시론'은 '도시 마케팅', '문화적 재개발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만, 이러한 경향들이 마치 80년대 저와 같은 문화'운동'론자가 걸었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됩니다. 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설득하고자 하는 문화경제학이 문화'경제'학으로 귀결되어 문화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경제를 위한 문화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하는 순진한 걱정의 연장에서, 1)문화경제학에서는 그러한 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2)문화의 가치를 경제나 여타 다른 영역이 아닌 문화 내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2. 저는 박정리 선생의 예를 들어서 수행하신 임교수님의 연구에 계발된 바가 많습니다. 또한 그 연구는 지자체의 문화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컨대 이외수 선생을 유치한 화천을 한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WTP 추계 조사로 그러한 점을 정당화시키기에는 부족한 바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불 용의'와 '지불'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문화유산'의 경우처럼 구체적 재산권과 관련되면 '지불 용의'조차도 아주 적지 않을까요? 3)정책은 결국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수반하게 마련인데, '유명' 예술가에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유명하지 않은' 예술가, 지역 주민의 생활예술에 대한 배분이 줄어들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4)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유명예술가의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그가 지역 속에서 '화학적으로 존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유명 예술가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은 그의 작업실이며, 그는 지역에서 화학적으로 존재하기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친 김에 순진한 질문을 더 드린다면 유명한 (따라서 경쟁력 있는) 예술가가 꼭 지역에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가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서울'로, 토오료으로 뉴욕으로 런던으로 파리로....나가는 것을 지역문화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만 보아야 할까요?

3. 저는 이념적으로 임교수님의 "문화 관련 정책결정을 이른바, 전문가의 울타리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과감하게 개방하여 그들의 의사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적극 찬동합니다. 그러나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갈등, 좁게는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 그러한 저의 이념에 회의를 갖게 됩니다. 또한 지방분권에 적극 찬성하지만, 막상 지방으로 이양된 문화사업들이나 균특회계로 수행되는 문화사업들을 보면 지자체의 문화정책 방향과 수준에 실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5)문화정책에서 전문가와 시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견 차이와 조정 문제에 대해 임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문화정책의 영역확장과 충돌」에 대한 논평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라도삼 연구원(이하 발제자)의 글은 장르 중심의 전통적인 문화정책이 새로운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과, 철학, 지원방식과 대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발제자는 이를 문화정책의 확장과 충돌로 정의하는데, 문화정책의 확장은 도시, 환경, 생태 등 기존에 문화정책이 포함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확장을 의미하고, 충돌은 장르 중심의 문화정책과 탈장르적 문화정책 사이의 충돌의 의미한다. 발제자는 순수예술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예술과 환경(지역), 생활(시민)의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융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이러한 발제자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관광부나 지방자치 단체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중요한 논의들을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논평은 발제자의 의견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과 발제자가 충분히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한다.

## 1. '문화도시'로서의 문화정책

주지하듯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은 참여 정부들이 가장 두드러진 정책이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문화적 재구성으로서 문화도시 정책은 발제자 말한 대로 문화정책의 확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염두에 않은 두 가지 점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하나는 문화도시의 실천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혹은 충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의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도시 정책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문화정책의 하나이면서도 몇몇 도시들은 이전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기도 하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경우가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라면 문화적 메트로폴리탄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경우는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을 다시 재생산하려는 잘못된 논리도 보이는 것 같고,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공세 속에서 사업의 추진이 왜곡되는 것 같기도 하다. 가령 발제자는 문화도시의 실질적인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충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화정책의 확장으로서 문화도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발제자는 문화정책의 확장의 발견으로서 문화도시 정책을 논의하다보니 장작 ‘문화도시’ 정책 안에 발견되는 이념과 철학 수행의 원칙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가령 문화도시에 대한 접근방식도 다양한 것 같다. 서울시처럼 신개발주의를 문화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도시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전주, 대구, 경주, 부천 등의 문화도시의 비전을 보면 오히려 특정한 장르를 중심으로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경향이 보이기도 한다. 도시들마다 산업, 예술, 환경, 관광 중 특정한 목표를 지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화도시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먼저 선행되어야하지 않을까 한다.

## 2. ‘확장’과 ‘충돌’로서 문화정책의 딜레마

발제자가 언급하고 있는 확장과 충돌로서의 문화정책은 사실 같은 문제의식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정책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기존 문화정책과의 충돌을 몰고 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문화정책의 확장과 충돌은 표면적으로 보자면 발제자의 지적대로 문화정책이 예술가 지원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보면 문화정책은 순수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문화관광부의 주요 업무 그 자체에서도 확장과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문화정책의 확장과 충돌은 영역과 영역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별 영역 내의 문제라는 점이다. 가령 기초예술지원 정책만 해도 예술의 개념정의와 지원 대상에 있어 상당한 확장과 충돌의 지점들이 발생하고, 문화산업만 해도 미디어, 방송, 통신 사이의 확장과 충돌의 경로는 너무나 많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역문화정책만 해도 같은 맥락으로 내부의 문제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 많다. 발제자의 언급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 설명을 듣고 싶다.

## 3. 문화정책의 새로운 지형들

발제자는 주로 문화도시 정책, 지역문화정책의 새로운 전화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확장과 충돌을 언급했는데 발표 주제가 이 문제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면 다른 분야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듯싶다. 발제자가 언급한 마지막 다섯 가지 대안사례들도 주로 문화도시, 지역문화 정책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발제자가 언급한 부분과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모두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저 발제자가 언급한 지역문화, 문화도시 정책의 실질적 내실화를 위한 다섯 가지 대안 중에서 법과 제도의 신설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위원회조직이 지역전체의 문제들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던 '문화환경영향평가'가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의견을 듣고 싶다. 몇몇 사람들은 이 제도가 지역의 문화발전에 있어 규제 장치라고 비판하는 것 같은데, 발제자의 의견은 어떤 알고 싶다.

그리고 사실 문화정책의 새로운 흐름은 문화도시나 지역정책만 특히 유별난 것은 아니다. 현재 예술정책 역시 창작, 향수, 유통, 교육, 국제화와 관련해서 많은 구상을 하고 있고, 문화산업정책 역시 유비쿼터스 시대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정책을 위해 새로운 제도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체육정책만 해도 엘리트정책과 생활체육을 동시에 발전시켜야할 과제들이 많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과 실행과정에서 문화관광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발제자의 글의 유의미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쉬운 것은 이러한 문화정책의 다른 분야에서도 가로질러가는 확장과 충돌에 대한 생각들이다. 이 문제가 접근하려면 예술과 환경, 장르와 탈장르의 구분보다는 창의성(예술적 감각)+일상성(공간/지역)+자원성(자본, 문화상징)+수행성(테크놀로지, 제도) 간의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먼저 지도그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2부

# 경기도 문화정책에 대한 성찰과 전망

---

경기문화재단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윤봉구(연극협회 경기도지회장)

향유자문화정책 활성화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확대

황정주(한국민예총 성남지부장)

「지역의 문화정책, 누가 어떻게 만들고  
실현하는가」 토론문

방영기(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



# 경기문화재단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윤봉구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장)

## I. 들어가는 말

경기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심포지움에 지정 토론자로 추천을 받고서 순간 망설이기를 거듭하였다.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지역현장예술인으로서 이미 지난 수년간에 걸쳐 경기문화재단과의 지원정책의 집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또는 참고하겠다는 말만을 듣고 전혀 실무 집행에 참고하지 않음은 물론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인 심포지움에 들러리 역할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경기문화재단에서 검토나 참고만 할 내용을 부르짖어야 하는가? 갈등의 연속이었으나 그나마 이번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을 할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물론 이번에도 검토나 참고만 하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토론에 임하기로 하였다.

먼저 발제 원고인 “씨뿌리고 거름주고 기다리기-문예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성찰”을 심도 깊게 정독한 소감을 한마디로 한다면 평소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적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풀이한 매우 정확한 훌륭한 발제 원고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충실한 자료 제시와 문화예술 행정의 본질적 한계와 지원사업 및 평가에 관한 한계, 그리고 지원의 당위성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였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발제자인 김정수 교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다만 당초 경기문화재단측에서 제시한 경기도 예술 진흥을 위한 대안 모색이라는 취지와 목적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되고 더불어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이나 지역의 현장예술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하여 논의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질의하고자 하며 근본적으로 경기지역 예술인을 확대하는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부분 까지도 토론하고자 한다.

## II.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 추진상 문제는 없는가?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내 최대 최고의 탁월하고 훌륭한 예술가들이 주거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와 활동은 엄연히 구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 즉 중앙무대에서 활동하고 단순히 주거지로 경기도에 적을 둔 예술계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 예술인이라 함은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대부분의 경기도민들은 중앙(서울)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하므로 지역의 예술활동은 여러모로 중앙(서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에 출자한 법인이니까 당연히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 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역시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경기문화재단만이 유일하게 경기지역 예술인들이 기댈 수 있는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문화재단 역시 서울의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경기예술인들은 어디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서울로 이적하여 중앙 즉 서울에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지원 신청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하고 서울문화재단도 하고 경기문화재단에 해야 하나?

지역의 예술인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다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창립이 10주년을 맞이하였다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로 출범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재단으로 다른 지역 문화재단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경기도내 시군 지역 예술인들이 시군 문화재단 설립 반대를 강하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나라 최초로 출범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이 잘못 되었을 경우 그 잘못된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전국의 문화재단이 잘못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까?

약 15년 전에 전국 16개 시도와 200여개 시군에서 문화예술회관 또는 시민회관들이 새로이 신축되어 운영조례를 만들 때가 기억난다. 일제시대의 시공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던 시민회관 또는 군민회관의 운영조례 즉 잘못된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 예술인들이 대관에 상업적 기준이 적용되어 애를 먹던 시절 행정 개혁을 부르짖어 겨우 조례를 개정 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이 소모되고 낭비가 있었는가?

단순히 최초라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까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왜 지역의 예술인들이 문화재단 설립을 반대하는가? 옥상옥이 되어 군림하며 아집에 빠져드는 문화재단을 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을 하나씩 되짚어 보자

### 1. 정기 공모사업과 기획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정기 공모사업의 경우 지역의 현장 예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일명 지원금 사냥꾼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내 예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류상 경기지역 예술인으로 등재한다거나 또는 지역에서 1회 이상 공연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경기지역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축제에 잠시 초청된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기지역의 특성상 서울 지역 예술인들의 왕래가 빈번하다보니 지원금만을 받을 경우 공연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양산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예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의 발제자이신 김정수 교수의 원고 연도별 정기공모지원 접수 및 지원 결과 (표1)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97년 484건이던 지원 신청자가 2006년도에는 1,354건으로 지원 신청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울의 일명 지원금 사냥꾼들이 양산되었다는 증거이다.

<표 1> 연도별 정기공모지원 접수 및 지원 결과

년도	접수수	지원수	지원결정율 (%)	총 지원금액 (천원)	건당평균 지원금액(천원)
2006	1,354	447	33.0	2,320,000	5,190
2005	1,490	469	31.4	2,198,600	4,687
2004	1,050	509	43.4	1,500,000	2,946
2003	912	556	55.0	1,500,000	2,697
2002	957	643	64.0	1,403,000	2,181
2001	1,056	495	48.2	1,200,000	2,424
2000	952	568	59.6	1,500,000	2,640
1999	1,095	465	42.4	1,500,000	3,225
1998	834	584	69.4	1,789,300	3,063
1997	484	324	66.9	533,000	1,645
<b>합 계</b>	<b>10,184</b>	<b>5,060</b>		<b>15,443,900</b>	

\* 자료: 「2005년 경기문화재단연감」 및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주) 1. 2001 ~ 2004년 : 일반공모지원사업 + 특별공모지원사업  
 2. 2004년까지 일반공모와 특별공모지원사업의 장르별 지원신청/지원 내역은 「재단 2004년 연감」 참조

경기지역예술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지원금 사냥꾼을 척결하고 진정한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가? 기획사업은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시행하는가? 진정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기획사업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 의해서 누가 하는가?

정말 궁금하다.

## 2. 지원 심사 제도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정기공모 지원사업의 심의절차는 1차 재단 내부의 행정심사, 2차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의 질적심사, 그리고 3차 인터뷰 심사로 진행되며 1차 심사는 재단 전문직 직원의 행정평가를 중심으로 30%의 배점을 반영하고 1차 행정심의 배점 기준표는 아래 <표 2>와 같다고 한다.

<표 2> 정기 공모지원사업 1차 심의 배점기준표

심의항목		심의내용 및 배점기준					
1	신청 자격	① 휴식년 대상자 또는 사업	승·불				
		② 도내 거주기간 및 활동실적	승·불				
		③ 신청제한 대상 단체	승·불				
		④ 지원제한 대상 사업	승·불				
		⑤ 기타 의무불이행 자 또는 단체	승·불				
2	사업목표의 적합성(10)	최상	상	보통	하	최하	
3	대상사업의 적절성(10)	10	8	6	4	2	
4	사업예산의 타당성(10)						

그런데 행정심사에 30%가 적정한 비율인가? 재단의 실무자가 임의로 지원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다.

2차 심사는 사업의 질적 평가이며, 재단 전문직 직원의 배수 추천으로 선정된 관련 장르에서 학계인사, 평론가, 현장 활동가 등을 위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질적 심사를 하고 배점은 70%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영역은 22개로 나누어지며 각 영역마다 외부 전문가 3~4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2차 질적 심의 배점 기준표는 <표 3>과 같다고 한다.

<표 3> 정기 공모지원사업 2차 심의 배점기준표

심의항목		배점	심 의 내 용			배점기준		
1	문화예술적 우수성	20	작품의 예술성(작품수준)이 높은가?			기준	20점	15점
			사업의 내용에 참신성·창의성·독창성이 있는가?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가?			최상	20	15
2	추진계획의 구체성·현실 성	15	추진계획이 사업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워졌는가?			상	16	12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수정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총사업비 조달계획에 현실성이 있는가?					
3	기대효과	20	문화예술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보통	12	9
			도민의 문예향수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					
4	추진능력	15	참가자들 또는 사업주체의 역량이 뛰어난가?			하	8	6
			지역사회에서 추진한 활동실적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관계)를 얻고 있는가?					
			최하			4	3	



그런데 2차 심사위원을 모두 재단의 전문직 직원의 배수 추천에 의거 외부 인사로 한다면 어떻게 서울지역 인사만이 심사위원으로 위촉 될 수 있을까? 물론 서울지역 심사위원만을 배수 추천하였겠지만? 왜 서울지역의 심사위원만을 고집하는가? 어떻게 단 한명의 지역의 심사위원이 없을까?

### 3. 지원사업의 성과에 평가와 자아 성찰은?

“문예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의 발제자이신 김정수 교수께서 『Ⅲ 문예진흥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고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난 10년간 재단이 시행하여 왔던 지원사업은 과연 그 목표를 어느 정도나 달성했는가?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지원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가 초래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기문화재단 측에서 작성한 연감이나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해보면 지원사업의 성과로 보통 두 가지 요소가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지원금 그 자체이다. 다른 하나는 지원금을 받아 이루어진 1차적인 결과물(혹은 활동)이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항목은 지원사업의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따라서 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사실상 그 성과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지난 10년간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이 과연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확한 판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문화예술 진흥의 척도는 어떠한지? 경기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라도 하여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는 없는지? 최소한 지역예술인들의 만족도 정도와 의견은 수렴 할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아예 필요 없는 걸까?

### 4. 문화예술행정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의지는 있는가?

“문예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의 발제자이신 김정수 교수께서 『Ⅳ 문화예술 행정의 본질적 한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와 예술은 기본적으로 주관적 가치판단의 영역이며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예측불가능한 창의성이 예술창작의 핵심요건이다. 반면 공공행정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규율과 위계질서가 생명이다. 따라서 문화에

술과 공공행정은 본래 상호이질적이며 양자의 관계는, 비유컨대, ‘백설공주와 백마탄 왕자’ 보다는 ‘미녀와 야수’의 관계에 더 가깝다.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한계와 정책 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한계, 그리고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한계, 마지막으로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한계 등 본질적 한계를 타개할 근본적 방법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역의 예술인과 지역의 예술행정가만이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과연 경기문화재단은 이러한 문화예술행정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의지는 있는가?

### 5. 재단의 지원사업 평가는 공정한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공공지원의 필요성과 공적지원의 원칙인 팔길이 원칙에는 적극 동참하나 선택과 집중의 다액소건의 집중지원과 다액소건의 분산 투자 방식도 필요하다는 김정수 교수의 발제원고에는 더 검토하고 토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재단의 지원사업 평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된다 하겠다.

현재 재단 지원사업의 1차적 결과물에 대한 사후평가는 행정평가와 모니터링 제도로 운영되며 행정평가는 재단 문예진흥지원금을 받은 단체나 개인에게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정양식의 정산서와 사업결과보고서, 지원금 사용증빙자료(영수증)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은 2001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추진계획대비 실현정도, 예술성 혹은 완성도, 기대효과, 기금지원의 필요성 등의 항목별로 평점을 매기는 평가방식이다. 지원 결정된 공모지원사업 중 장르별, 지역별, 주제별로 추출된 사업을 선정하여 시민모니터링, 문예비평가들에 의한 심층 모니터링, 그리고 언론사 연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모니터링 운영 방식

구분	구성	역할	평가보고
시민 모니터	·자발적 시민 참여 (공개모집)	· 시민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사업 평가 · 지원사업 궁극적 수혜자인 시민 입장반영	·평가지표 ·참관기
심층 모니터	·비평가, 기획자, 심의위원 (공개모집과 추천)	· 지원사업 결과의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 · 비평가와 창작자간의 소통	·평가지표 ·비평문
언론 연계 모니터	·지역 언론 기자, ·분야별 전문가 (언론추천)	· 지원사업 결과의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 · 언론을 통한 사업결과의 대중적 의미공유	·취재기 ·비평문

\* 자료: 「2005년도 경기문화재단 연감」

지원사업 사후 평가에서의 행정 평가는 필수불가결한 내용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 필요성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모니터링 제도에 대하여는 다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미 “문예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의 발제자이신 김정수 교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술작품·활동에 대한 완벽하게 객관적인 질적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평가 결과가 결코 객관적으로 완전한 측정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술적 가치의 주관성과 모호성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든 질적 수준에 대한 완벽한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원사업 결과물을 평가하는 데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애를 많이 쓰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평가 결과의 신뢰성도 반드시 증가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무 철저하고 꼼꼼하게 평가작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큰 매몰비용이 되어버린다. 그 결과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평가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과신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모니터링 운영방식에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 구축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III. 경기문화재단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주제 “문예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의 발제자이신 김정수 교수가 밝힌바와 같이 1997년에 경기도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이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9조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제20조는 이를 위하여 ①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②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③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의 지원**, ④ 도지정 테마박물관의 지원, ⑤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⑥ 국제문화교류센터의 운영, ⑦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9조부터 제24조 규정에 의거 경기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전액 경기도비로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 것이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은 설립목적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요약한다면 경기문화재단은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문화재단이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 문화재단이 도내예술인을 확대하는 현상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 되었는가?

유추하여 본다면 이번 주제 “문예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재정찰”의 발제자이신 김정수 교수께서 제4장 문예술행정의 본질적 한계 3.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한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설령 문화정책의 목표와 수단 모두 제대로 잘 결정된다고 해도 집행 과정에서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조직 자체의 한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법규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한 목적과 수단의 도치현상은 관료제의 대표적 병폐의 하나로 흔히 지적된다. 특히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나 원대한 취지보다는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따라서 융통성 있는 집행보다는 기계적이고 획일화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원하려는 본래의 정책의도가 집행과정에서 좌절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한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관리자 역시 지역 예술인을 확대하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유추하여 본다.

경기문화재단의 수년간 지원 신청 심의 결과를 보면 지역의 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만 가중 될 뿐이다. 타 지역 특히 서울지역의 지원금 사냥꾼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사업 중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2007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을 실례로 들어보자고 한다.

아래 표5와 같이 연극부문에 국한하여 전국 16개 시도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지역내 인사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반면 경기도만 유일하게 타지역(서울)인사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작품 선정 결과 모든 시도가 지역외 단체는 0(제로)인 반면 경기도만 유일하게 타지역 단체가 70% 선정되는 최악의 경기연극 확대 결과를 초래 하였다.

(사)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에서 조사한 이 자료를 보면 과연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 법인인가? 아니면 한국문화재단의 경기지부인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러한 문제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전혀 개선 의지가 없음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경기문화재단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표 5> 전국 16개 시도 2007년도 무대공연 지원 사업(연극부문) 현황

시도	심사위원 구성 현황			지원 선정 작품 현황		
	지역 내	지역 외	구성진	지역 내	지역 외	선정 편수 및 장르
서울	5	0	지역교수 4명, 예술감독 1명	28	0	연극 23, 뮤지컬 5
부산	6	0	지역교수3명, 연극인 2명, 방송인 1명	19	0	연극 19
대전	3	0	지역교수 2명, 연극인 1명	5	0	연극 5
울산	5	0	지역교수 3명, 연극인 1명, 예술인 1명	4	0	4
대구	5	0	지역교수 4명, 연극인 1명	14	0	연극 10, 뮤지컬 2, 마당극 2
광주	4	1	지역교수 3명, 연극인 2명, 국악1.	3	0	연극 3
인천			자료 미공개			
충북	5	0	지역교수 3명, 연극인 1명, 공무원 1명	12	0	연극 11, 무용극 1
충남	5	0	지역교수 5명	12	0	연극 11, 무용극 1
경북	5	0	지역교수 4명, 연극인 1명	14	0	연극 13, 음악극 1
경남			*심사위원 자료제출 거부	15	0	연극 15
전북	6	0	지역교수, 지역연극인4,기타1	4	0	연극 3, 뮤지컬 1
전남			*심사위원 자료제출 거부	9	0	연극 5, 마당극 4
강원	5	0	지역교수 1명, 연극인 4명	13	0	연극 13
제주	4	0	연극인 4명	4	0	연극 2, 마당극 2
경기		5	교수2,평론1,연극인2[모두 서울]	4	8	

지역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전형적인 탁상 행정을 일삼고 있는 고압적인 경기문화재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론 경기도민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도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며 또 경기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더불어 경기문화예술의 진흥에 최일선 현장에서 분투하는 지역 예술인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지 않은가? 되묻고 싶다!

#### IV. 맺는 말

우리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한 문화예술을 위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 또한 인정해야만 한다. 예술 활동·작품의 수준 및 장기적 영향에 대한 백퍼센트 객관적인 평가는 불가능하다. 비록 지금 당장은 지원사업의 성

과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지원금으로 인한 창작이 많이 누적될수록 예술의 질적 발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마치 농사와도 같다. 파종을 하자마자 곧 열매를 따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햇볕과 양분을 넉넉히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지원사업으로 인해 무언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려면 충분한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문예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의 발제자이신 김정수 교수께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문예진흥 지원사업을 경기문화재단이 꼭 해야 하는가? 경기문화재단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역 예술인들의 불신감이 팽배한 현시점에서 다시금 근본적인 문제 즉 경기문화재단의 무용론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토론해 봐야 할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장기적으로 볼 경우 현재 상태의 조직으로는 개혁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궁극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되 문화예술진흥법 제23부터 제23조16까지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유사한 가칭 경기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 향유자문화정책 활성화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확대

황정주(한국민예총 성남지부장)

1,000만이 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중 얼마나 자기자신을 경기도민이라 생각할까?

이 물음은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수도권이란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리고 인식되며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성이 약하다는 것의 반문이다. 또한 서울의 외곽으로서의 신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등 다양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인한 경제적 문화적 격차또한 크다. 그리고 한강을 기준으로 하는 경기북부와 거리적 생활문화적 차이또한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거주지는 경기도에 있으나 경제활동이 서울에 많이 집중돼있고,공연관람 취미여가활동 등의 문화생활역시도 경제활동세대일수록 서울에 집중돼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음악을 접하고 싶으면 홍대, 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무대를 보고싶으면 대학로 등 여전히 서울중심의 문화향유활동이 많다.

또한 경기도의 문화기반시설의 활용은 여전이 낮기도 하지만 그 이용계층이 노인 부녀자 청소년 등이 대부분인것이 현실이다. 문화관련 동호회참여율에서도 보여지듯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동호회참여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문화공동체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듯 문화를 매개로 모든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독창적 지역문화가 형성되는 속에 지역민을 결속하는 강력한 매개로 자리잡게 될것이다. 이에 근거, 경기도문화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실현을 목표로 하는 자신의 근본 존재이유에서 부터 새롭게 출발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기문화재단이 그어떤 문화재단보다 향유자중심의 문화예술정책을 펴고 있었다는 것이 평상시 생각이었던 본 토론자로서는 이번 발제문을 접하며 이외란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면 전반적인 경기문화재단의 예산구조와 사업규모를 통일적으로 진단키어려운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그간 경기문화재단이 향유자중심의 문화예술정책을 많이 강조해왔고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소외계층 지원사업’ ‘소규모 마을축제’ 등 참신하고 다양한 내용의 지원사업을 많이 수행해왔기 때문이었다.그러나 문화복지 증진사업의 예산편성에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으나 그 증액규모가 여타 다른분야

에 비해 적은 것은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에 생각해볼 대목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문화재단은 기간 10년의 역사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전문가중심의 문화예술정책을 더 넓은 광의의 문화를 정책적으로 펼쳐내며 문화향수권찾기, 향유자중심의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매개자와 향유자의 네트워크 정책 등 한국 문화예술정책의 방향타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

경기도는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정체성이 약하고, 서울의 외곽으로, 주변부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지역적 거리감과 생활적환경의 차이, 정서적 차이로 인하여 도내에서의 문화공동체와 도내 각 지역에서의 생활문화가 구체적으로 형성돼있지 못하다. 그것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유형을 통일적으로 결합, 경기도민의 생활문화공동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데서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동네와 밀착돼있는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의 활용에서 창의적인 기획과 운영의 묘가 나와야 한다. 문화기반시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면 이젠 시설중심이 아닌 그 시설을 사용할 사람중심의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자체 문화의집의 경우 두곳이 있는데, 한곳은 야간개방으로 하여 경제활동세대 직장인들이 퇴근후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어느 또다른 곳은 저녁시간 개방불가로 낮시간 여유있는 노인들이나 여성들만이 부분 활용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어느 한쪽은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동네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환경조성이 되지만 다른쪽은 형식적인 문화사업으로 그칠 여지가 많다. 또한 전문역량의 배치로 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속에 향유자가 창작자가 되어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확충의 편차또한 줄여나가야 한다.

경기도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은 다양하게 많이 꾸려져있으나 농촌으로 갈수록 그 편차가 심하며 문화예술인력또한 부족한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이 농촌지역임을 감안할때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부족, 문화적 소외지역으로 자리매김된지 오래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좀더 생활속에 밀착하는 작은규모의 문화복지시설이 요구된다.

또한 향유자들을 위한 정책에서 무엇보다 함께 고민해야할 것은 지역 전문역량과의 네트워크를 기반한 활용으로서 지역의 건강한 문화예술단체가 지역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에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문예단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조직이며 지역민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일년에 몇번 지역축제와 전시, 무대공연 등을 통해 지역민을 만나는 것이 태반이며 일상적인 문화예술체험이나 교육 강좌 등으로 다양한 동호회 건설 지원등의 사업속에 지역민과 소통하는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데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그중에는 교육사업에서 자원봉사나 최소한의 교통비 지급,단기간 강좌 등 불안정한 경제적 구조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향유자들에게 전문성에 기반한 좀더 질높은 문화예술향유권을 보장해주는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문예단체의 지역생활문화 활성화의 마인드를 높이고 지역민과 더 밀착하는 문화예술활동이 요구된다.

문화의 향유자는 '모두'이다. 창작자와 매개자 향유자가 예술적 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창작자 향유자로서의 주체이다. 그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강화시키느냐에 따라 문화예술이 그들만의 문화가 모두의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과정에서 문화가 생활의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경기도의 다양한 대규모 소규모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향수권과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는 근본이유는 문화예술이 진정 경기도민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모두를 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기 여겼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향후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가 어느 광역시도에도 뒤지지 않게 구축한 튼튼한 문화향유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더욱 활성화된 향유자문화정책 현실화를 이루기위한 예산편성, 지역문예단체 예술인들과의 구체적 연계와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데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높여내는 마인드 등으로 경기도민의 생활문화공동체형성에 기여해주시기를 바란다.

## 「지역의 문화정책, 누가 어떻게 만들고 실현하는가」 토론문

방영기(경기도 문화공보위원회 의원)

o. 경기문화재단 설립10주년을 기념하여 '경기도 문화정책에 대한 성찰과 전망'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경기도의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각계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밝혀주신 발표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시간이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어 경기도 문화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심포지움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의 문화정책, 누가 어떻게 만들고 실현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옥고를 써주신 발표자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o. 먼저 발제자는 발표문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정책을 참여(Participation)라는 관점에서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참여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정책에 대해 지방문화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조하는 논지로써 지역문화의 특징과 장점을 역사성을 바탕으로 토착성((Adhesion)과 다양성(Diversity)이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시대 지역 문화정책의기본적 접근 방향으로서 문화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분권의 전제로서 지역문화의 자율성(Autonomy)과 자생성, 정체성(Identity)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지역 주민 참여와 자율을 주장하고 있다.

2. 참여의 관점에서 지역 문화를 정부주도형, 민관협력형,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하고 이중 민관협력형을 '정부선도-민간협력형'과 '민간선도-정부협력형'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유형(Type)의 장점과 한계들을 경기도 지역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관점에서 지역문화를 경기도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예산구조와 편성구조의 상이성을 밝혔고,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예산규모와 사업구조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논지를 펴고 있다.

3. 예산구조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고 있다.

첫째, 문화컨텐츠의 부족으로 경기도의 문화적 자산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지역적 문화컨텐츠가 사업예산으로 연계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선심성 예산지원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주기적으로 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예술단 운영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술단 운영에 대해 경기도 여러 지역이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해 공동지원과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예술단에 대한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시설투자비의 확대에 지역별로 역사적 배경과 지역적 정서를 근간으로 시설투자비와 유지관리비 지출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별로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의 집에 대한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 4. 주민참여형 문화도시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역문화개발의 필요성으로 지역문화가 동등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동등한 위상으로 전승, 개발되기 위해선 다양한 문화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역문화예술의 개발이유와 타당성을 문화예술의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과 국민생활에서 필수품화 되어가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문화예술의 창조와 발전의 불확실성 때문에 공공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의 문화적 특성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차원에서 육성, 관리 되어져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전략적 지역문화 기획방향으로 주민들 삶에 필요한 기본여건 조성, 문화적 역사와 유산의 뒷받침, 문화시설을 통한 문화활동의 활성화, 지역문화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주민들의 문화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들을 통해 바람직한 문화자치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지방정부의 지역문화개발 역점사항으로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화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관리체계 유지, 문화시민의식 및 향수능력 개발, 지역간 문화교류 노력, 다양한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개최 등을 전략적 지역문화 기획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

#### 5. 지방적인 참여와 지역문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에 근거한 문화를 개발하여야하고, 지역주민의 관심을 철저히 분석하는 노력들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개발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로서 지방정부, 지역사회, 민간부문 등 3개의 섹터(Sector)를 주장하고 있다. 사업추진과 참여형 지역사회를 위해선 기존의 관주도중심형에서 21세기 정치체제인 거버넌스(Governance)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는 주민이 중심에 서고 행정기관, 기업,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 NGO), 전문가그룹 등이 둘레가 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 중심형 거버넌스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파트너형 사업추진체제로 파트너십(Partnership)정신을 기본으로 주요 그룹들(주민, 기업, 지방 자치단체)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합의하에 우선순위 결정, 사업계획, 실행, 평가 등을 제안하고 있다.

6.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주요 과제로 하여 기존의 보건과 복지의 협소한 개념을 넘어선 「지역주민통합서비스」 마련, 즉 보건과 복지 이외에도 문화, 고용, 생활체육, 안전, 주거, 평생교육 등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된 공적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체계의 한축으로 문화통합서비스도 제공하여 지역문화 분권화는 물론 서로 다른 공공문화 기반 시설간 서비스네트워크도 수용자인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축으로 재정립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경기도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문화정책의 발전은 필수적이고, 지역의 문화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방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을 설정하고 지원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으로 말하고 있다.

o. 발표자의 ‘지역의 문화정책, 누가 어떻게 만들고 실현하는가’ 라는 발제문에서 문화정책을 참여(Participation)라는 관점에서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참여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문화예산 관련 구조와 예산규모를 분석한 부분에서는 경기도 각 기초자치단체의 실례를 들어 분석하여 대안 탐색적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논지 중 시대 상황에 맞는 문화정책 수립과 조직체계 마련 등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함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발표문 내용 중 논리전개가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한다.

질문1) 예산분석을 통해 본 지역문화 정책의 문제점(16쪽)부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과 교향악단의 운영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활용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술단에 대한 아웃소싱 해야 한다고

논지를 펴고 있는데, 먼저 예술단의 기능을 살펴보면 연주/교육/연구기능으로 대변될 수 있고, 다만 현재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예술단 운영을 연주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유는 발표자가 본문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지역 문화개발을 위해 각 지역의 역사적 배경위에 다양성과 자율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문화적 특징은 토착성과 다양성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의 정체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예를 들면 경기도 각 지역 혹은 기초 자치단체 지역에서 전래되어오고 있는 설화나 노래 등 무형/유형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작품화를 위한 투자와 연구 등 콘텐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발표자는 경기도 여러 지역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예술단 운영을 주장했는데, 현재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소속 도립예술단이 나름대로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해 연주와 교육활동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의 결과(Output & Outcome)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며,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 예술단들도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립예술단과 기초 자치단체 예술단들은 각자 고유한 역할(Role)과 임무(Mission)를 충실히 실행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침, 배려, 관리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예술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 기초 자치단체들도 조속히 예술단을 구성하여 지역민과 문화적 소외계층에 속해 있는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수권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피력을 바랍니다.

질문2) 지방적인 참여와 지역문화에서 발표자는 주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 그리고 사업 추진과 참여형 지역사회 부분에서 지역문화 기획에서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한 변수(Variation)이고, 문화기획 작업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관심에 근거한 문화개발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관심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라고하며 문화개발을 중심으로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과 참여자(Participator)를 구분하고 운영위원회를 조직, 운영위원회 참여자들의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주민 중심형 거버넌스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기관은 제도화와 하드웨어 중심의 자원동원화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은 기술제공과 시장창출의 역할을 수행하고, NGO는 인적자원 네트워킹을 통해 휴먼웨어 중심의 자원 봉사 기능을 수행, 전문가는 창조적 지식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비전과 전략,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역할 분담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발표자의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정치사회 구조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정책의 사회적정당성(Social Validity)과 합리적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을 위해선 필요한 사항이지만, 정책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과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Restricted Rational)으로 미루어 볼 때 이상적인 주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정부의 여러 국책사업 추진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해서 수천억에서 수 조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정책집행 실현되지 않아 국가적 낭비를 경험한 바 있고, 또한 이해관계를 당사자들의 선호에 맞게 조정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발표자의 주장들은 정책결정 과정(Process of Policy Decision Making) 전체에 걸쳐서 주민의견과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동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나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혹은 주민 중심형 거버넌스를 조직하여 지역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피력을 바랍니다.

3부

# 경기도 문화정책의 새로운 과제들

---

국제교류 현황과 개선방안  
오후석(경기도 문화정책과장)

「생태문화적 개발의 과제와 전망」의 토론문  
안창모(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문화다양성은 복수성의 윤리가 아니라  
권리의 윤리를 의미한다  
노명우(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





# 국제교류 현황과 개선방안

오후석(경기도 문화정책과장)

## ① 현황 및 실태

- 국제교류 현황 : 18개국 22개 지역
  - 자매결연 체결 : 12개국 15개 지역
    - 아시아(4), 북미(4), 유럽(4), 중남미(1), 아프리카(1), 대양주(1)
  - 경제(우호) 협력 : 7개국 7개 지역
    - 아시아(5), 북미(1), 유럽(1)
- 지역별 교류추진 평가
  - 세계 각 지역에 걸쳐 다수의 지방정부와 교류협력관계를 맺어 지역진출의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된 상태이나, 일부지역에 편중된 교류활동 전개로 효과성 다소 미흡
    - 중국(3개성) 및 일본과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활성화
    - 일부 유럽, 미주, 호주 지역과는 공무원파견 등 인적교류에 한정
  - 공공부문은 비교적 교류가 활발하나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교류 미약

구분	지역수	아시아	미주·유럽	기타
계	21	8개 지역	11개 지역	2개 지역
A	5	가나가와현 요녕·산동·광둥성		퀸즐랜드주
B	8	하타이성	유타·버지니아·플로리다주, 바스트랄란트주, 멕시코주, 북잉글랜드자치단체연합	하우텡주
C	8	타이페이, 캄푹주, 남슬라웨시주	브리티시콜롬비아주, 까달루냐주, 모스크바주, 북홀랜드주, 알또바라나주	

- \* 註 1) 최근 우호협력체결지역인 인도 마하라쉬트라주 제외  
 2) A:적극 교류지역, B:인적교류 등 일반 교류지역, C:교류미미지역

## ② 그간 교류·협력 분석

- 내실과 실익보다는 양 위주의 자매결연사업 추진
  - 구체적인 협력사업 또는 지역별 교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자매결연지역 확대에 치중한 자매결연사업 추진으로 교류의 지속성과 효과성

미흡

▷ 자매결연(경제협력) 체결 : (95) 2개 지역 → (96) 3개 지역 → (97) 4개 지역

- 국제교류관계 체결 후 국제교류관리 및 평가 시스템 미구축

□ 정보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체계적인 추진 미약

- 조직의 불안정성,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경험·전문성 부족 및 교류의 지속성 저해

▷ 국제협력실(96) → 국제통상협력실(97) → 투자관리과(98) → 외자유치2과(99) → 교류협력과(00) → 국제통상과(01) → 국제교류담당 축소(2담당 → 1담당, 06)

-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수집 취약으로 구체적 교류협력 전개 제약

▷ 외국어 활용능력 부족으로 인한 국제정보의 수집, 저장, 활용 시스템 미구축

- 자매결연지역과 공무원 교류사업 파견 공무원의 구체적 역할 및 활동 계획 없이 근무, 귀국 후 연계된 관련부서 미 배치로 활용도 저하

▷ 교류공무원 현황('91~'07.3월) : 19명(국제통상과 근무인원 4명)

□ 공공부문 위주의 교류사업 추진으로 민간부문 취약

- 정주도의 우호·친선교류 위주의 비경제분야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국제인식과 이해 제고 미흡

▷ 도대표단 파견, 어학연수, 선진행정사례 정보수집 등 벤치마킹 중심의 교류

▷ 수출확대를 위한 기업인 참여(통상촉진단 등)와 국제교류사업의 민간 참여 미미

- 민간단체, NGO 등과의 협력체제(Partnership) 미 구축

▷ 국제수준의 이해와 시민의식개혁, 국제협력 공감대 형성 등의 체계 미흡

③ 활성화 방안

□ 기본방향

○ 그간 교류실적 및 향후 발전성 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접근·관리

- 적극 교류 : 교류가 활발하고 정치·경제적 중요지역

▷ 요녕·광둥·산둥성(중), 가나가와현(일), 퀸즐랜드주(호), 하타이성(베), 유타·버지니아·플로리다주(미), 마하라슈트라주(인)

- 일반 교류 : 교류가 미미하나 거점지역으로 교류 필요성 지역

▷ 바스트말란트주(스), 북잉글랜드자치단체연합(영), 브리티시콜롬비아

(캐), 멕시코주(멕), , 하우텡주(남)

- 현상 유지 : 교류가 미미하고 협력 가능성이 낮은 지역

○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 국제분야 전문지식, 경험 및 언어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보강

○ 민간부문(민간단체, NGO) 국제 교류·협력 강화

- 직능단체 등 분야별 친선협회 구성·운영

- 경제기관(단체), 청년회의소, 연구소 등 민간부문간 교류 적극 지원

○ 체계적인 국제 교류·협력 DB 구축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

- 국제자매결연(우호협력) 지역 종합정보

- 대표단, 연수단 등의 해외 방문기관·시설 정보

- 행정우수 사례 벤치마킹 결과 우수사례 등

□ 세부 추진계획

①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협력사업 추진

○ 적극 교류지역 : 10개 지역

- 중국 3개성 및 일본 : 경제, 문화, 국제회의 등 각 분야별 지속 교류

- 미국 3개주 : IT, BT, 재해방재 등 첨단지식산업분야 협력 및 투자유치

- 퀴슬랜드주 : 농업기술, 영어연수, 문화 등 각 분야별 지속교류

- 하타이성 : 벤처기업간 교류, 기업투자진출 등 경제분야 협력

- 마하라쉬트라주 : 경제·통상, 대형건설 Project 참여

○ 일반 교류지역 : 7개 지역

- 하타이성 : 벤처기업간 교류, 기업투자진출 등 경제분야 협력

- 바스트말란트주 : 북유럽 거점지역, 통상분야 교류

- 브리티시콜롬비아주 : 영어마을, 자원(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 등)산업

- 멕시코주 : 통상 및 박물관 등 문화분야 중심의 협력방안 모색

- 북잉글랜드 자치단체 연합 : 생명공학분야, 영어마을(원어민영어교사) 등

- 모스크바주 : 기초 과학기술, 통상분야 교류

- 하우텡주 : 통상, 스포츠(축구), 영어연수 등 협력

② 교류관계가 취약한 해외 주요지역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지역과의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

- 동유럽 2004년 EU신규 가입국가(10개국) 및 중앙아시아 등 교류 취약 지역

•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10개국 중 상호 실익교류가 가능한 지역

• 카자흐스탄 등 자원부국으로 자원개발 참여 등의 협력 가능지역

▷ 취약지(전국) : 폴란드, 헝가리 외 동유럽, 중앙아시아, 이집트의

## 중동, 남아공외 아프리카

### - 주요 협력분야

- 자원개발 경험, IT·BT, 정보통신, 대형건설사업 참여 등 경제협력  
⇒ 2단계(2008년 이후) 협력관계 확대
- 대상지역 일반현황, 지역특성, 시장규모 등 지역정보 수집
- 경기도와의 유사성·상호 보완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검토
- 외교통상부, KOTRA 등 현지주재기관 추천 및 국제자문대사 협의

### ③ 민간단체, NGO 등 민간부문 국제 교류·협력 추진

#### ○ 직능단체 등 분야별 친선협회 구성·운영

-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중·일 자매결연지역과 우선 실시
- 주요 협력사업
  - 포럼, 전시회, 문화·산업 시찰 등
- 소요예산 : 연 50,000천원(2008년 본예산 반영)

#### ○ 민간단체, NGO 등의 국제 교류·협력사업 지원

- 도민의 국제수준 인식을 도모할 수 있는 도민 참여형 교류사업(생활 체험, 홈스테이, 자원봉사 등)으로서 지속 가능하고 상호 교환 추진 가능사업
- 지원방법 : 사업비 일부 지원(50%이내)
  - 사업 추진시 파급 효과, 실행 타당성 등 평가기준을 마련 지원
- 소요예산 : 연 100,000천원(2008년 본예산 반영)

#### ○ 자매결연별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 유도

- 자매결연지역 파견 및 해외 유학 공무원의 언어권 동아리 구성 유도
  -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3개 동아리 구성·운영
  - 동호회별 자매결연지역 정보수집, 문화체험, 행정우수사례 수집·전파
- 지원방법 : 현지문화체험비(항공료, 체재비)의 50%이내
- 소요예산 : 45,000천원(2007년 추경 반영)

## 「생태문화적 개발의 과제와 전망」 토론문

안창모(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주제인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본 발제는 혹시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기에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왜? '생태문화적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우리의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환경파괴의 현장을 적절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가 지적한 현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진단에 따른 원인규명과 처방에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토론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토론자가 지적하고 있는 '대단히 삭막한 공간문화'가 형성된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도시에서 '삭막한 공간'은 왜 탄생했을까? 우리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그 원인일까? 아니면 그러한 천박한 자본주의를 배태해낸 식민지배/ 전쟁/ 경제개발... 이런 것들이 원인일까? 정확하게 근원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문제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처방은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수 밖에 없어 진부하지만 이 문제를 짚고 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삭막한 도시공간'이라는 말 속에는 서구의 도시공간이 비교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모델로 설정하곤 하는 서구사회에서도 자신들의 생태 혹은 역사문화 환경을 보호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지 않다. 산업혁명이후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만드는데 몰입했던 모더니스트들이 모더니즘의 장미 빛 환상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찾게된 시점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2차 세계대전이후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서구인들은 비로소 모더니즘의 광풍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삭막한 환경'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산업혁명기에 서구의 도시는 지극히 반생태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서구에서 근대의 도시계획과 각종 도시건축 관련 정책은 산업혁명으로 피

폐해였던 도시를 치유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공원의 탄생은 그 해법의 하나였다.

서구국가의 과거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산업혁명과 전쟁을 겪으면서 각기 다른 처방으로 피폐해진 자신들의 도시환경을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산업혁명에 기초한 근대화를 겪지 않았던 우리에게 6,70년대의 경제성장은 서구와는 다르게 도시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경제개발에 몰입하던 시절에 생태와 역사문화 환경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보릿고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던 시절에 '생태와 문화'는 사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구와는 다른 근대화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구와는 다른 도시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 한 예가 우리의 도시정책과 계획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피폐해진 도시환경'의 재생을 위해 '위생과 저소득층 주거공급'이 정책의 핵심이었던데 비해, 우리에게 있어 도시정책과 계획의 핵심은 주택정책이었다.

우리의 도시환경의 문제가 무계획한 주택정책에 있다면 주택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잘못된 주택정책과 그 정책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을 놓아둔 채, 주변의 생태 또는 문화를 운운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 '단지화된 공동주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단지화된 공동주택들이 산재해 있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입구를 갖는 폐쇄적인 구조로 만들어졌데, 폐쇄화된 단지 내부 환경은 대부분 외부 환경에 비해서 우수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공교육이 부실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다.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이 부실하니 많지 않은 월급의 대부분을 자신이 필요한 책을 사는데 써야한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지형 아파트가 널리 보급되었다. 서구에서는 단지형 아파트가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공공공간에 있다. 그들의 공공공간이 공동주택에 비해 우수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성에 기초한 도시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또는 구입한 단지의 좋은 환경을 단지 밖과 공유하기 싫고 그 결과는 울타리를 통해 도시와 단절된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점차 우리의 도시는 외부와 유리된 '단지'의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자

기 돈을 들여서 애써 구축한 나의 환경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과 환경이 좋아져야한다. 공공의 생태가 복원되면 더 이상 울타리로 경계지워지는 단지 내의 가짜 생태는 사라지고 단지의 경계는 소멸되어 명실상부한 도시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 결과가 도시생태의 복원으로 이르지 않을까...

만일 이 진단이 옳다면 도시에 있어서 생태문화환경의 복원 또는 개발에 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

해법! 특히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계천의 복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청계천의 복원은 '생태의 복원'이 아니다. '생태복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개발논리가 숨어 있으며, 이를 위해 복원된 청계천은 수천억원이 투자된 생태모조 장남감에 불과하다. 이와같이 '가짜 생태'의 청계천 복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경제개발기에 우리의 치부를 가장 찌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하천복개라는 우리의 과거 행위를 '복원'을 통해 치유하는 것은 도시에 대한 부채를 털어내는 일이자, 경제성장의 가시적 성과에 내재된 생태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전기 스위치로 조작되는 생태에 수천억원을 기꺼이 사용했던 것이다.

최근에 우리는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있다. 그러나 마을만들기에도 도시에서 '마을 만들기'와 농촌에서 '마을 만들기'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 도시에서 '마을 만들기'는 '환경 개선'이 주된 이슈지만, 농촌에서 마을만들기는 '생존의 해법' 찾기가 주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만들기에 둘 사이의 다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없이 하나의 틀에서 이야기 되는 경우가 많다. '생태와 문화' 또는 '생태문화'에도 '마을만들기'의 문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실패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옳은 이야기이고,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이 말에서 단어를 약간 바꾸면 '서울에서 배운다. 지역에서 배운다'가 아닐까?

우리나라는 지난 세월 빈곤을 효과적으로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불균등성장 전략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불균등전략의 폐해는 지역의 불균형과 산업의 불균등은 물론 삼과 문화의 피폐함 등 사회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불균등성장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할 과

제를 안고 있는 셈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해법의 하나로 발제자는 '생태문화적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세기에 '서울'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은 경기도에 많은 것을 의존했다. 의존했다기보다는 떠 넘겼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 했을까? 지금까지 경기도는 넘겨받은 문제를 경기도 성장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서울로부터 문제를 떠 넘겨받았다는 인식이 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오늘의 경기도는 과거 서울이 직면했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구조적으로 서울보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가 옆에 있었지만, 경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와 같은 인접시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도시외에 농촌, 어촌, 산촌을 고르게 갖고 있는 경기도는 전국의 문제를 집약시켜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60/70년대 한국사회의 불균등성장전략을 답습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국민의료보험과 관련된 공익캠페인과 실천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공단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공익캠페인은 너무나 당연한 정당성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공익캠페인의 배경에는 의료보험재정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발병에 따른 치료비를 절감하기위해 예방에 대한 투자가 의료보험재정 개선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생태문화적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발제자의 주장은 치유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방치했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엄청난 치료비를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예방프로그램에 비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정도의 공익성이라면 정부나 지자체가 예방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화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중에서 "근대"라는 장르의 추가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범주는 항상 확대되어 왔으니, 근대가 추가된 것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근대는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대' 문화를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대에 대한 시선의 변화는 곧 근대기의 아픈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해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



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되던 세기말 세기초에 우리는 바쁘게 지내면서 우리가 잊고 지내온 시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20세기초 우리 삶의 모습이 다양하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인 성과의 하나가 50년 이상된 문화자산 중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자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다. 근대문화자산의 문화재 지정은 우리가 바쁘게 지나쳐온 지난 세기의 삶이 역사화되었다는 의미이자 공공의 영역에서 역사적 평가의 대상으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근대건축물은 보존과 활용 또는 철거의 대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곳에 위치한 근대건축물의 경우 단순히 근대건축물이 역사적 문화적 평가의 대상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근대건축물은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영역 속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기를 떠나서 삶의 소중함에 대해 경중을 가리기 어렵지만, 삶의 흔적을 우리 주변에 많이 간직하는 것은 삶의 환경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문화재! 그 중에서도 근대문화재는 세대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가교의 역할을 해 준다. 근대문화재의 보존은 당시를 몸으로 체험했던 세대의 논리로 보존되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들의 후속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대의 세대가 '무엇'에 '어떤 가치'를 담아 우리의 후속세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후속세대는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어낼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문화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개발주의 역시 끝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발주의의 끝은 망하는 것이고 망하면 개발주의 역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주의자만 망하거나 개발주의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망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개발주의를 주변에서 한사코 뜯어 말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범인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덕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노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의식은 훌륭했지만 갖은 시련을 극복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천력이 부족하다면, 시작 이전보다 좌절감이 더욱 클 뿐 아니라 후속자들에게 더욱 힘든 시련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외자들은 이들의 노력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도전이 한 두 번의 시도와 짧은 시간 내에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지말라는 것보다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은 그들의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는 것일 수 있다.

## 문화다양성은 복수성의 윤리가 아니라 권리의 윤리를 의미한다

노명우(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문화다양성’이란 개념의 인플레이션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문화다양성’이란 표현은 무비판적으로 아무 때나 아무 주제에서든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선’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무자비하게 사용되고 있다. 문화다양성을 수사학적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문화다양성 보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생태계의 종다양성처럼 인간 사회에서 다양성을 보장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표현은 현실에서 화려한 언어적 수사에 불과하다면 지나친 말일까?

주류의 위치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문화다양성의 보장이란 절실한 요구가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화다양성은 ‘다문화주의’처럼 자신이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화다양성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문화다양성은 수사학이거나, 좀 더 세련된 담론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위협받고 있는 소수의 문화를 지닌 사람에게 주류가 아닌 자신의 문화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끝장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남발될 수 있는 이유는,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 때문이다. 많은 경우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문화의 병존, 병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단수가 아닌 복수’, ‘다채로움’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문화주의의 이념과 결합한 문화다양성론은 생태계의 종다양성을 차용하여, ‘존재한다’는 명제를 옹호한다. 즉 생명 다양성이 존재하듯이, 다문화성은 조재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주의와 결합한 문화다양성론은 복수성의 윤리로 귀착된다.

베르나르가 다문화주의와 결합한 문화다양성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양성’ 개념에 대한 재규정 시도는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는 디베르수스(diversus)가 지닌 원래의 의미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면서, 디베르수스는 복수의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립되는’ ‘불일치하는’ ‘모순되는’과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베르나르는 그렇기에 다양성은 다양한 것들의 온순한 조화와 병렬이 아니라 이 개념에는 운동과 투쟁의 차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디베르수스’는 고정된 결과나 상태가 아니라, 신사적인

합의의 상태가 아니라 투쟁 속에서 생겨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서로 다른 것끼리의 만남은 소박한 다문화주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적인 만남'으로 귀착되지 않는다. '디베르수스'의 원래 개념에 충실할 경우, 서로 다른 것끼리의 만남, 게다가 서로 다른 것이 갖고 있는 자원의 차이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력이 상이할 경우 inter는 평화적인 만남보다는 적대적인 만남으로 귀착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에서 중요한 것은 복수성의 윤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수성의 윤리가 권리의 윤리로 격상되어야 하는 것이다.